

법 제 처

국무총리지시제 8 호

(720-3583)

1984. 5. 14

수신 수신처 참조

제 목 법령의 현실화와 발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지시

1. 정부에서는 80 년대에 들어와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법령정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국정지표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과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법령정비사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법제도가 정제되지 아니하고 현실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현상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원·부·처·청의 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4, 11-53 (-19, 47, 48, 50)

나. 1

法令整備 綜合計劃에 關한 指針

1984. 5.

1. 目 標

－ 國政指標의 法的 具現 －

- o 現實與件에 副應하는 合理的인 法制度
- o 民意에 바탕을 둔 알기 쉬운 法制度
- o 體系화된 法制度

2. 整備基準

가. 現實에 맞지 아니한 法令

①制定 또는 全文改正된 후 最近 5年間 重要部分의 實質的인 修正・補完이 없는 것.

－ 그동안의 運營實績, 現實與件의 變化, 關聯制度의 變更등을 면밀히 評價하여 現實與件 및 關聯制度와의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整備한다.

(例示 : 道路整備促進法 등 사실상 放置되고 있는 法令)

②豫定하고 있는 規律對象이 擴大 또는 縮小되는 등의 事由로 規律對象을 제대로 規律할 수 없는 것.

－ 새로운 狀況變化를 反映하여 現實에 맞도록 整備・補完한다.

(例示 : 船員法, 農水產物流通및 價格安定에 관한法律 등)

③國際的인 連繫下에 共通的基準과 原則 등에 따라 處理되는

法制度 分野

- 다른 나라의 立法變遷 또는 國際法規 등의 變遷에 맞추어 國際化時代에 對處할 수 있도록 整備한다.

(例示: 海洋汚染, 著作權, 特許, 郵便關係法)

나. 애매모호한 規定

- ① 規定의 解釋에 관하여 紛爭이 자주 發生하는 對民關係法令 規定

- 그동안의 法執行事例(訴願·訴訟 事例包含)를 參酌하여 紛爭發生을 立法的으로 豫防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規定한다.

(例示: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의 規定中 “重大한 交通事故 또는 頻煩한 交通事故로 많은 死傷者를 發生하게 한 때” 등)

- ② 行政處分の 基準이 없거나 있어도 애매모호하거나 不合理하여 法律的 爭訟이 자주 일어나는 것.

- 行政處分の 基準을 部令 또는 訓令으로 마련하고 處分 基準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다 명료하게 合理的인 基準을 마련한다.

* 「애매모호한 認許可 規定의 整備」는 國務總理指示 第5號 ('84. 4. 6) “ 認許可制度의 全面的 再檢討에 관한 指示 ” 에 依據 整備한다.

다. 알기 어렵거나 國法 全體體系와 調和되지 아니한 法令

①國民의 日常生活과 密接하게 關聯된 法令中 一般國民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 알기 쉬운 文章과 用語로 全面的으로 풀어쓴다.

(例示：道路交通法，各種稅法等)

②基本法制度를 有名無實하게 하거나 法生活의 混亂을 줄 憂慮가 있는 臨時措置法，臨時特例法 其他 特例規定

— 基本法令에 吸收可能한 것은 吸收，吸收不可能한 것은 서로 統合하거나 基本法制度和 調和되도록 한다.

(例示：刑法과 各種 刑事特別法等)

③同一한 民願事項 기타 關聯事項이 數個의 法令으로 分散되어 있는 것.

— 하나의 法令으로 統合可能한 것은 統合한다.

(例示：援護關係法令，公衆衛生關係法令，建築法・都市計劃法 등에 分散되어 있는 建築關係規定等)

④기타 法令相互間 矛盾・抵觸되는 規定 또는 어느 法令에서 引用하고 있는 關聯 法令條文이 改正되어 맞지 아니하게 된 規定

라. 一貫性있는 國家施策遂行에 支障을 주는 法令

①基本이 되는 法律의 主要內容이 變更되었거나 이를 제대로 受容하지 못하고 있는 關聯法令

— 그 內容을 受容하여 基本的 法律의 趣旨가 達成될 수

있도록整備한다.

(例示: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の 制定에 따른 各政府投資機關設置法の 整備, 國土利用管理法의 理念을 具體化하기 위한 土地利用 또는 規制關係法律의 整備, 地方稅法上 加算金制度, 地方財政法上 公有地의 無斷占用者에 대한 辨償金徵收, 地方公企業法등)

②特定規定의 施行을 위한 事項을 다른 法律에서 定하도록 委任하였으나 이를 具體化한 法律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 迅速히 制定・整備한다.

(例示: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47條 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適用除外에 관한法律制定 기타 關聯 法令整備, 國土利用管理法 第3條의 2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法律의 制定・整備등)

③法律의 規定이 基本方向만을 提示・宣言함에 그치고 있어 이에 附隨되는 立法이 따라야 함에도 附隨立法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法律을 具體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法令을 整備한다.

(例示: 消費者保護法에 따른 關聯法令 制定・整備등)

④憲法施行과 關聯된 法律

— 迅速히 制定 또는 改正 整備한다.

(例示 : 農地賃貸借制度, 監査院法, 訴願法 등)

마. 未備된 法制度分野의 發展

① 社會現象을 規律할 必要性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規律할 法制度가 없거나 未備된 分野

— 社會現象을 健全한 方向으로 誘導하기 위하여 關係法令을 마련한다.

(例示 : 割賦販賣, 訪問販賣, 強力犯 등 犯罪被害者補償 등)

② 經濟的 價値가 있는 資源 등의 開發・活用을 위한 法制度가 未備된 分野

(例示 : 土石採取權 등 認定, 소프트웨어 開發者權益保護)

③ 權利救濟制度로서 未洽한 民事上的 義務確保規定

— 法令의 흠결을 틈타 債務 기타 지켜야 할 義務를 故意로 免脫하는 者 등에 대하여 債權의 補填 기타 義務確保手段을 強化 한다.

(例示 : 民法, 民事訴訟法, 破産法 등)

④ 國民에 대한 不利益處分時 事前에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聽取하는 聽聞制度가 未備된 認許可 등의 法令

— 選別的으로 導入하도록 한다.

⑤ 效率的 團束手段이 未備된 有害無許可營業法令

— 直接强制手段 등 效率的 規制團束方案을 選別的으로 導入한다.

⑥ 不適合하게 된 罰則, 均衡이 맞지 아니한 罰則

- 다른 義務確保手段으로 轉換하거나 均衡이 맞게 調整・整備한다.

⑦ 輕微한 行政法規違反事犯에 대하여 刑罰인 罰金を 課하게 되어 있는 경우.

- 過怠料轉換基準에 따라 罰金を 過怠料로 轉換하도록 한다.

바.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와 關聯된 法令

① '81 ~ '83 年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와 關聯된 法令
중 未整備 法令

② '84 年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와 關聯된 法令

③ '85 年 이후 確定된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에 關聯된 法令

*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作業 對象選定基準〔別添 1〕參照

3. 整備對象法令의 範圍

—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 條例, 規則 —

- o 制定 또는 全面改正된 후 最近 5 年間 改正된 바 없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 條例, 規則을 原則으로 하고, 部分改正된 바 있더라도 當該法令의 基本的 制度에 관한 改正이 없는 것을 包含한다.

* 參考: 整備檢討對象法律例示〔別添 2〕

4. 推進體系

- 法制處는 法令整備事業推進을 總括한다.
- 各院・部・處・廳은 所管法令에 대한 法令整備事業을 推進한다.
- 各院・部・處・廳은 次官(次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法令整備推進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다만, 既存의 適正한 審議機構가 있는 경우에는 可能한 한 當該 機構를 活用하도록 한다.
法令整備推進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5人以上 15人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同委員會는 案件別로 主務 室・局長, 關係部處의 室・局長, 專門家 및 關聯民間團體 代表가 包含되어야 하며 公務員의 數와 기타 委員의 數를 갈게 構成함을 原則으로 한다.
- 內務部長官은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이 計劃에 準한 自治法規整備推進計劃을 作成, 各地方自治團體(서울特別市 除外)의 長에게 送付하고 各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금 그 所管 條例・規則에 대한 整備作業을 推進・完了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 서울特別市는 自體的으로 自治法規整備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한다.

5. 推進方法

- 法令整備事業은 繼續事業으로 推進하되, 每年 3月末('54年의

경우는 6.10)까지 當該年度에 着手할 計劃을, 每年 6月末 ('84 年의 경우는 8月末)까지 當該年度의 法令整備推進狀況 中間報告를, 每年 12月 10日까지 當該年度의 法令整備推進狀況 年末報告를 作成, 法制處에 提出한다.

- o 當該年度 法令整備計劃을 修正한 때에는 上半期・下半期別로 中間報告 및 年末報告時에 修正內容을 함께 提出하도록 한다.
- o 法令整備推進計劃에는 案件別로 法令整備推進委員會構成의 概要에 관한 事項도 包含시킨다.
- o 法令整備에 着手한 案件은 當該年度에 整備案을 作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事案이 複雜하여 當該年度에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繼續事業으로 推進한다.
- o 各院・部・處・廳은 每年 적어도 2個이상의 法令에 대하여 整備案을 作成함을 原則으로 한다.
- o 法令整備는 當該法令의 主務部處 主管으로 推進하되, 여러機關에 關聯되는 것은 基本法所管部處 主管下에 關聯部處와 共同으로 推進한다.
- o 法制處는 모든 法令에 關聯된 一般的・共通的인 法制度로서 改善되어야 할 事項 및 새로운 立法의 導入이 必要한 分野에 대하여 能動的으로 法令整備案등을 마련하여 主務部處의 整備를 支援한다.
- o 法令整備事業과 關係없이 그때그때의 國家施策을 遂行하기 위하여 法令을 改正하는 경우에도 當該 改正事項外에 法令整備

基準에 따라 모든 規定을 評價하여 法令整備事項을 함께 改正・推進하도록 한다.

6. '84 推進日程

區 分	日 程	主 管
1. 法令整備推進方案 各部處示達 (國務總理 指示)	'84. 5.10	法 制 處
2. 法令整備推進計劃作成, 法制處에 提出	'84. 6.10	各 部 處
3. 法令整備推進狀況中間報告 法制處에 提出	'84. 8.31	各 部 處
4. 法令整備推進狀況 年末報告 法制處에 提出	'84.12.10	各 部 處
5. 整備案 作成時 整備要綱 法制處에 提出	隨 時	各 部 處

[別添 1]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作業對象選定基準

1. 政府組織內部的 非能率的, 浪費的 法令・制度

- o 不必要한 組織・機能의 重複, 不合理한 機能配分・政策決定의 多段化
- o 非合理的인 人事・豫算 및 事務管理制度

2. 大多數 國民에게 不便을 주는 法令・制度

- o 複雜한 具備書類, 까다로운 書式
- o 煩雜한 處理節次, 處理期間의 長期化
- o 多元化된 處理窓口, 多岐化된 適用法令
- o 遵守하기 어려운 過度한 規制

3. 國民의 自律性を 沮害하는 支援・規制 制度

- o 不當한 自由競爭 制限
- o 지나친 行政干涉
- o 民間의 創意力を 制限하는 劃一的인 規制
- o 企業의 體質을 弱화시키는 支援制度

4. 下向的・一方的인 政策決定 方式

- o 聽聞, 意見陳述等 利害關係人의 參與機會 未洽
- o 上意下達式 行政行態
- o 國民에게 周知할 時間을 주지 않는 行政節次

5. 行政環境變化에 不適合한 法令・制度

- o 時限의 經過・目的達成等으로 失效된 制度
- o 現實과 符合되지 아니하는 制度
- o 前近代의 法令・制度・行態

6. 國民의 道德觀念, 價值觀을 해치는 制度나 慣習

- o 무분별한 外來奢侈・頽廢風潮
- o 傳統的 美風을 輕視하는 制度나 行態
- o 特惠나 脫法の 素地
- o 人間의 尊嚴性을 해치는 要因
- o 不公正한 去來秩序 등

7. 社會正義의 實現을 沮害하는 法令・制度

- o 擔當公務員의 裁量行爲의 餘地가 많은 法令
- o 請託素地가 있는 制度
- o 職業安定・社會保護制度 未洽部門
- o 勞使協調 및 健全한 企業家 精神을 沮害하는 要因

[別添 2]

整備検討対象法律(例示)

法 律 名 稱	制定 또는 全文改正日字	備 考
1. 行政一般・司法編		
○ 行政代執行法	54. 3.18	
○ 司法書士法	63. 4.25	大法院規則과 大統領令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委任規定의 妥當性 與否 등
○ 國籍法	48.12.20	
○ 更生保護法	61. 9.30	
○ 少年法	58. 7.24	未成年者保護法과의 關係檢討 등
○ 民法	58. 2.22	
○ 涉外私法	62. 1.15	
○ 身元保證法	57.10. 5	
○ 信託法	61.12.30	
○ 外國人土地法	61. 9.18	
○ 重機抵當法	66.12.23	
○ 民事訴訟法	60. 4. 4	
○ 行政訴訟法	51. 8.24	
○ 民事訴訟印紙法	54. 9. 9	
○ 戶籍法	60. 1. 1	

○ 地籍法	75.12.31	不動產登記法과의 關係檢討 등
○ 刑事關係法		
刑法과 特定犯罪加重		
處罰等에 관한法律・罰金		
等臨時措置法等 刑事特		
例法, 刑事訴訟法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50. 4.21	
<u>2. 地方行政・治安編</u>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67. 2.28	
○ 住民登錄法	62. 5.10	
○ 地方公企業法	69. 1.19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의 關係檢討 등
○ 地方財政法	63.11.11	公有地의 無斷占用者에 대한 辨償金徵收의 國有財産法과의 關係檢討 등
○ 地方稅法	61.12. 8	加算金制度의 國稅徵收法과의 關係 및 알기 쉬운 法令으 로의 再編成 등 檢討
○ 未成年者保護法	61.12.13	少年法 등과의 關係檢討 등
○ 信用調査業法	77.12.31	
○ 道路交通法	61.12.31	알기 쉬운 法令으로의 再編成 檢討 등

3. 財政・經濟編		
○ 韓國造弊公社法等 各種 政府投資機關設置關係法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따 른 整備 (經濟企劃院主管, 關聯部處協 調)
○ 監査院法	63.12.13	
○ 豫算會計法 (關聯) 豫算會計에 관 한特例法	61.12.19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關聯法令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등 다른法令에 規定된 公正 去來關係規定의 統合 必要性 및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47條第7項의 規定 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適用 除外根據法律 制定 檢討등
○ 政府保管金에 관한法律	61.12.13	
○ 消費者保護法 및 工 產品品質管理法등消費者 保護關聯法令	80. 1. 4	各 個別法の 消費者保護關 係規定이 消費者保護法 정 신에 비추어 妥當한지 여 부 檢討(商品의 安全確保 ・品質表示・標準化・去來條 件・被害救濟등)

		消費者的 實質的保護를 爲 한 立法分野 發掘 및 具 體的立法 (例, 割賦販賣法・訪問販賣 法・製造物責任法 등)
o 物品管理法	62. 1.20	
o 各種稅法		不合理한 規定의 有無 및 알기 쉬운 法令으로의 再編成 檢討
o 租稅犯處罰法	51. 5. 7	
o 租稅犯處罰節次法	"	
o 專賣犯處罰節次法	76.12.31	
o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 에 관한特別措置法	66. 8. 3	第 5 條의 2 (擔保의 共託)의 擔保의 必要性 및 擔保額의 適正性與否 檢討와 第 7 條의 3 (會社整理節次에 대한 特 例)의 規定의 妥當性檢討등
o 信託業法	61.12.31	
o 擔保附社債信託法	62. 1.20	
o 保險業法	77.12.31	
o 輸出保險法	68.12.31	
o 各種 經濟關係育成法 ・振興法・促進法(資		産業間 均衡있는 發展誘導에 未洽한 制度의 補完, 經濟發

本市場育成에 관한法律・ 機械工業振興法・企業公 開促進法 등)		展與件에 맞지 않거나 障碍 要因이 되는 規定의 整備等 檢討
4. 國防・援護編		
o 防禦海面法	63. 3.23	
o 軍用電氣通信法	61.12.30	
o 軍事援護關係法		
5. 教育・文化編		
o 教育法	49.12.31	
o 私立學校法	63. 6.26	
o 映畫法	66. 8. 3	
o 著作權法	57. 1.28	
o 有線放送受信管理法	61. 8.24	
o 社會團體登錄에 관한法律	63.12.12	
6. 農・水產編		
o 農產物價格維持法	61. 6.27	
o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 定에 관한法律	76.12.31	
o 種苗管理法	73. 2.26	
o 主要農作物種子法	75. 4. 4	
o 植物防疫法	61.12.30	
o 農產物檢査法	62.12.24	
o 農業災害對策法	67. 1.16	

○ 防潮堤管理法	63.12. 5
○ 農地擴大開發促進法	75. 4.11
○ 農業倉庫業法	61.12.30
○ 水產業法	53. 9. 9
○ 漁業資源保護法	56.12.14
○ 沙防事業法	62. 1.15
<u>7. 商工編</u>	
○ 不正競爭防止法	61.12.30
○ 貿易去來法	67. 1.16
○ 輸出組合法	61. 9. 9
○ 輸出檢查法	62.10. 4
○ 發明保護法	58. 3.11
○ 計量法	61. 5.10
<u>8. 建設編</u>	
○ 各種土地關係法	

土地收用根據規定을 둔 法律中 土地收用法上의 公共事業과 重複되어 不必要한 土地收用根據規定의 削除 整備 및 土地收用法上의 公共事業範圍外의 事業을 위한 土地收用根據規定의 土地收用法에의 吸收統合 檢討

		合理的인 理由없이 土地收 用節次上 要求되는 事業認 定을 擬制하는 등 特別節 次規定의 調査整理 檢討 補償額의 算定基準인 基準 地價制度의 統一方案 檢討 土地評價를 위한 資格制度 의 一元化問題 檢討
o 建設業法	71. 1.19	
o 建築法	62. 1.20	
o 水道法	61.12.31	
o 道路整備促進法	67. 2.28	
o 河川法	71. 1.19	
o 公有水面管理法	61.12.18	公有水面管理法에서는 地方港 灣의 管理者가 海運港灣廳長 으로 되어있고, 港灣法에서는 地方港灣의 管理廳이 市·道 知事로 되어 있어 兩法間の 內容이 相衡되고 있는 問題 가 있으므로 關聯部處와 協 調하여 公有水面管理體系의 再整備 與否 檢討
o 公有水面埋立法	62. 1.20	

9. 保健・社會・勞動編

- 食品衛生法
- 公衆衛生關係法
 - ・ 公衆沐浴場業法
 - ・ 宿泊業法
 - ・ 理容師 및 美容師法

62. 1. 20

여러 개의 個別法으로 分散規定되어 있는 公衆衛生關係法의 統合整備

- 環境保全法

77. 12. 31

- 醫療法

73. 2. 16

- 藥師法

63. 12. 13

- 災害救護法

62. 3. 20

- 産業安全保健法

81. 12. 31

事業場現實與件에 맞지 아니한 規定의 有無등 檢討

10. 交通・遞信編

- 鐵道法

61. 9. 18

- 自動車運輸事業法

61. 12. 30

- 道路運送車輛法

62. 1. 10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63. 4. 4

- 航空法

61. 3. 7

- 船員法

62. 1. 10

- 郵便物運送法

60.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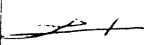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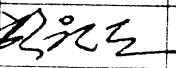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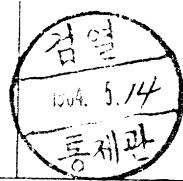
11. 기 타

- 各種 營業등 認許可
法規

- 不利益處分時 事前意見聽取制度 導入擴大方案 檢討
- 有害無許可營業의 根絕方案 檢討
- 課徵金導入擴大方案 檢討
- 輕微한 行政法規違反에 대하여 罰金을 規定한 各種 法律
- 土石採取規制와 關聯된 各種法律
- 土石採取規制와 保護에 관한 單一法 制定檢討
- (關聯)
- 山林法
- 沙防工事法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農地擴大開發促進法
- 草地法
- 酪農振興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都市計画法• 自然公園法• 宅地開發促進法• 公有水面管理法• 河川法•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 에 관한特別措置法• 道路法• 産業基地開發促進法等		
---	--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국무총리지시 제 8 호	(전화번호 720-3583)	전 결 기 및 조 항 전 결 사항
처리기간		법 제 제 장	국 무 총 리
시행일자	1984. 5. 14	장명준 1/3	
보존연한			
보 조 기 관	차 장  실 장 		합
기안책임자	김재홍		
경 유 수 신 참 조	수신처참조	1984. 5. 14 법제처	통 제 
제 목	법령의 현실화와 발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지시		
<p>1. 정부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법령정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법령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국정지표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과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p> <p>2. 그러나 법령정비사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법제도가 정착되지 아니하고 현실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현상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원.부.처.청의 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p>			
첨 부 :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 끝.			
수신처 : 가. 4, 11-53 (-19, 47, 48, 50)			
나. 1			

1205-25(2-1)A(갑)
1981. 12. 18승인

정직 질서 창조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
표 단 양(1,500,000매 인 매)

법령정비 종합계획에 관한 지침
=====

1. 목 표

- 국정지표의 법적 구현 -

- 현실여건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법제도
- 민의에 바탕을 둔 알기 쉬운 법제도
- 체계화된 법제도

2. 정비 기준

가. 현실에 맞지 아니한 법령

① 제정 또는 전문 개정된 후 최근 5년간 중요부분의 실질적인 수정·보완이 없는 것.

- 그동안의 운영실적, 현실여건의 변화, 관련제도의 변경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현실여건 및 관련제도와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한다.

(예시 : 도로정비촉진법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법령)

② 예정하고 있는 규율대상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규율대상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것.

- 새로운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보완한다.

(예시 : 선원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등)

③ 국제적인 연계하에 공통적기준과 원칙등에 따라 처리되는 법제도 분야

- 다른 나라의 입법변천 또는 국제법규등의 변천에 맞추어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예시 : 해양오염, 저작권, 특허, 우편관계법)

나. 애매모호한 규정

①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대민관계법령 규정

- 그동안의 법집행사례 (소원·소송 사례포함)를 참작하여 분쟁발생을 입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규정한다.

(예시 : 자동 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중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때" 등)

②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거나 있어도 애매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법률적 쟁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

-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 또는 훈령으로 마련하고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다 명료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 『애매모호한 인허가 규정의 정비』는 국무총리지시 제5호('84. 4. 6) "인허가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에 관한 지시"에 의거 정비한다.

다. 알기 어렵거나 국법 전체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한 법령

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중 일반국민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 알기 쉬운 문장과 용어로 전면적으로 풀어쓴다.

(예시 : 도로교통법, 각종 세법등)

② 기본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법생활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임시조치법, 임시특례법 기타 특례규정

- 기본법령에 흡수 가능한 것은 흡수, 흡수불가능한 것은 서로 통합하거나 기본법제도와 조화되도록 한다.

(예시 : 형법과 각종 형사특별법등)

③ 동일한 민원사항 기타 관련사항이 수 개의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

-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가능한 것은 통합한다.

(예시 : 원호관계법령, 공중위생관계법령, 건축법·도시계획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건축관계규정등)

④ 기타 법령상호간 모순·저촉되는 규정 또는 어느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문이 개정되어 맞지 아니하게된 규정

라. 일관성있는 국가시책수행에 지장을 주는 법령

① 기본이 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법령

- 그 내용을 수용하여 기본적 법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예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각정부
투자기관설치법의 정비, 국토이용관리법의 이
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또는 규제관계
법률의 정비, 지방세법상 가산금 제도, 지방재정
법상 공유지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지방공기업법등)

- ② 특정규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
임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 신속히 제정·정비한다.

(예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적용제외에
관한법률 제정 기타 관련 법령정비, 국토이용관
리법제3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개
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정비등)

- ③ 법률의 규정이 기본방향만을 제시·선언함에 그치고 있어 이에
부수되는 입법이 따라야 함에도 부수입법이 따르지 아니한 경
우
-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정비
한다.

(예시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관련법령 제정·정비등)

④ 헌법시행과 관련된 법률

- 신속히 제정 또는 개정 정비한다.

(예시 : 농지임대차제도, 감사원법, 소원법등)

마. 미비된 법제도분야의 발전

① 사회현상을 규율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법제도가 없거나 미비된 분야

- 사회현상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마련한다.

(예시 : 할부판매, 방문판매, 강력범등 범죄피해자보상등)

②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등의 개발·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된 분야

(예시 : 토석채취권등 인정, 소프트웨어 개발자 권익보호)

③ 권리구제제도로서 미흡한 민사상의 의무확보규정

- 법령의 흠결을 틈타 채무 기타 지켜야 할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는 자 등에 대하여 채권의 보전 기타 의무확보수단

을 강화한다.

(예시 :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등)

- ④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시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제도가 미비된 인허가등의 법령
 - 선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 ⑤ 효율적 단속수단이 미비된 유해무허가영업법령
 - 직접강제수단등 효율적 규제단속방안을 선별적으로 도입한다.
- ⑥ 부적합하게 된 벌칙, 균형이 맞지 아니한 벌칙
 - 다른 의무확보수단으로 전환하거나 균형이 맞게 조정.정비한다.
- ⑦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하여 형벌인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는 경우
 - = 과태료전환기준에 따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한다.

바.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된 법령

- ① '81 - '83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와 관련된 법령중 미정비 법령
- ② '84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와 관련된 법령
- ③ '85년 이후 확정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에 관련된 법령

*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작업 대상선정기준 [별첨1] 참조

3. 정비대상 법령의 범위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 규칙 -
- 제정 또는 전면 개정된 후 최근 5년간 개정된 바 없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 규칙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개정된 바 있더라도 당해 법령의 기본적 제도에 관한 개정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 참고 : 정비 검토대상 법률 예시 [별첨 2]

4. 추진체계

- 법제처는 법령정비사업추진을 총괄한다.
- 각 원·부·처·청은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각 원·부·처·청은 차관(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기존의 적정한 심의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 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법령정비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위원회는 안건별로 주무 실·국장, 관계부처의 실·국장, 전문가 및 관련민간단체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수와 기타 위원의 수를 같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계획에 준한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작성, 각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의 장에게 송부하고 각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 조례·규칙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서울특별시는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5. 추진방법

- 법령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매년 3월말 ('84년의 경우는 6.10)까지 당해연도에 착수할 계획을, 매년 6월말 ('84년의 경우는 8월말)까지 당해연도의 법령정비추진상황 중간보고를, 매년 12월 10일까지 당해연도의 법령정비추진상황연말보고를 작성, 법제처에 제출한다.
- 당해연도 법령정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상반기·하반기별로 중간보고 및 연말보고시에 수정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법령정비추진계획에는 안건별로 법령정비추진위원회구성요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킨다.
- 법령정비에 착수한 안건은 당해연도에 정비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 각 원·부·처·청은 매년 적어도 2개 이상의 법령에 대하여 정비안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정비는 당해법령의 주무부처 주관으로 추진하되, 여러기관에 관련되는 것은 기본법소관부처 주관하에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 법제처는 모든 법령에 관련된 일반적·공통적인 법제도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새로운 입법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법령정비안등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의 정비를 지원한다.
- 법령정비사업과 관계없이 그때그때의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개정사항외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모든 규정을 평가하여 법령정비사항을 함께 개정·추진하도록 한다.

6. '8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	관
1.	법령정비추진방안 각부 처시달 (국무총리 지시)	'84. 5. 10		법	제 처
2.	법령정비추진계획작성, 법제 처에 제출	'84. 6. 10		각	부 처
3.	법령정비추진상황중간보고 법 제처에 제출	'84. 8. 31		각	부 처
4.	법령정비추진상황 연말보고 법제처에 제출	'84. 12. 10		각	부 처
5.	정비안 작성시 정비요강 법제 처에 제출	수 시		각	부 처

[별첨 1]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 대상 선정 기준
=====

1. 정부조직내부의 비능률적, 낭비적 법령·제도
 - 불필요한 조직·기능의 중복, 불합리한 기능 배분·정책결정의 다단계화
 - 비합리적인 인사·예산 및 사무관리제도
2.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제도
 - 복잡한 구비서류, 까다로운 서식
 - 번잡한 처리절차, 처리기간의 장기화
 - 다원화된 처리창구, 다기화된 적용법령
 -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
3. 국민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원·규제 제도
 - 부당한 자유경쟁 제한
 - 지나친 행정간섭
 - 민간의 창의력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규제
 -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지원제도

4. 하향적·일방적인 정책결정 방식

- 청문, 의견진술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기회 미흡
- 상의 하달식 행정행태
- 국민에게 주지할 시간을 주지 않는 행정절차

5. 행정환경변화에 부적합한 법령·제도

- 시한의 경과·목적달성 등으로 실효된 제도
-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 전근대적 법령·제도·행태

6. 국민의 도덕관념, 가치관을 해치는 제도나 관습

- 무분별한 외래사치·퇴폐풍조
- 전통적 미풍을 경시하는 제도나 행태
- 특혜나 탈법의 소지
-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요인
- 불공정한 거래질서 등

7.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여지가 많은 법령
- 청탁소지가 있는 제도
- 직업안정·사회보호 제도 미흡부문
- 노사협조 및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요인

(별첨 2)

정비검토대상법률(역시)
=====

법률명칭	제정 또는 전문개정일자	비고
1. 행정일반. 사법편		
◦ 행정대집행법	54. 3. 18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이원 화되어 있는 위임규정의 타당성 여부 등
◦ 사법서사법	63. 4. 25	
◦ 국적법	48. 12. 20	
◦ 갱생보호법	61. 9. 30	미성년자보호법과의 관계 검토 등
◦ 소년법	58. 7. 24	
◦ 민법	58. 2. 22	
◦ 섭외사법	62. 1. 15	
◦ 신용보증법	57. 10. 5	
◦ 신탁법	61. 12. 30	
◦ 외국인투자법	61. 9. 18	
◦ 중기저당법	66. 12. 23	
◦ 민사소송법	60. 4. 4	
◦ 행소송법	51. 8. 24	
◦ 민사소송인지법	54. 9. 9	
◦ 호적법	60. 1. 1	
◦ 지적법	75. 12. 31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 검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관계법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 법등 형사특례법, 형사소송법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50. 4.27	
<u>2. 지방행정. 치안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방개량촉진법 ◦ 주민등록법 ◦ 지방공기업법 ◦ 지방제정법 ◦ 지방세법 ◦ 미성년자보호법 ◦ 신용조사업법 ◦ 도로교통법 	67. 2.28 62. 5.10 69. 1.19 63.11.11 61.12. 8 61.12.13 77.12.31 61.12.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검토 등 공유지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보상 금징수의 국유재산법과의 관계 검 토 등 가산금 제도의 국세징수법과의 관 계 및 알기쉬운 법령으로의 재편 성등 검토 소년법등과의 관계검토 등 알기쉬운 법령으로의 재편성 검토 등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비 (경제기획원 주관, 관련부처 협조)
<u>3. 재정. 경제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조폐공사법등 각종 정부 투자기관설치관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법 ◦ 예산회계법 (관련) 예산회계에관한특별법 	<p>63.12.13</p> <p>61.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관련법령 		<p>및</p> <p>불가안정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공정거래관계규정의 통합 필요성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적용 제외근거법률 제정 검토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 소비자보호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등 소비자보호관련법령 	<p>61.12.13</p> <p>80. 1.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별법의 소비자보호관계규정이 소비자보호법 정신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검토 (상품의 안전확보. 품질표시. 표준화. 거래조건. 피해구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법 ◦ 각종세법 	<p>62. 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실질적보호를 위한 입법분야 발굴 및 구체적입법 (이, 할부판매법. 발문판매법. 제조물책임법 등) <p>불합리한 규정의 유무 및 알기쉬운 법령으로의 직편성 검토</p>

◦ 조세범처벌법	51. 5. 7	
◦ 조세범처벌절차법	"	
◦ 전매범처벌절차법	76.12.31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	66. 8. 3	제 5조의 2(담보의 공탁)의 담보 의 필요성 및 담보액의 적정성여 부 검토와 제 7조의 3(회사정리절 차에 대한 특례)의 규정의 타당성 검토 등
◦ 신탁업법	61.12.31	
◦ 담보부 사채신탁법	62. 1.20	
◦ 보험업법	77.12.31	
◦ 수출보험법	68.12.31	
◦ 각종 경제관계육성법.진흥법. 촉진법(자본시장육성에관한 법률.기계공업진흥법.기업공 개촉진법 등)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우도역 미흡한 제도의 보완, 경제발전여건에 맞 지 않거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정 의 정비등 검토
<u>4. 국방.원호편</u>		
◦ 방어해면법	63. 3.23	
◦ 군용전기통신법	61.12.30	
◦ 군사원호관계법		
<u>5. 교육.문화편</u>		
◦ 교육법	49.12.31	
◦ 사립학교법	63. 6.26	

◦ 영화법	66. 8. 3
◦ 저작권법	57. 1.29
◦ 유선방송수신관리법	61. 8.24
◦ 사회단체등독에관한법률	63.12.12
<u>6. 농.수 산편</u>	
◦ 농산물 가격유지법	61. 6.27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 한법률	76.12.31
◦ 증보관리법	73. 2.26
◦ 주요농작물증작법	75. 4. 4
◦ 식물방역법	61.12.30
◦ 농산물검사법	62.12.24
◦ 농업재해대책법	67. 1.16
◦ 방조제관리법	63.12. 5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75. 4.11
◦ 농업창고업법	61.12.30
◦ 수산업법	53. 9. 9
◦ 어업자원보호법	56.12.14
◦ 사방사업법	62. 1.15
<u>7. 상공 편</u>	
◦ 부정경쟁방지법	61.12.30
◦ 무역거래법	67. 1.16
◦ 수출조합법	61. 9. 9

◦ 수출 검사법

62.10.4

◦ 발명보호법

58.3.11

◦ 계량법

61.5.10

5. 건설편

◦ 각종 토지관제법

◦ 토지수용근거규정을 둔 법률 중
토지수용법상의 공공사업과 중
복되어 불필요한 토지수용근거
규정의 삭제 정비 및 토지수용
법상의 공공사업범위외의 사업
을 위한 토지수용근거규정의 토
지수용법과의 흡수통합 검토

◦ 합리적인 이유없이 토지수용절
차상 요구되는 사업인정을 억제
하는 등 특별절차규정의 조사
정리 검토

◦ 보상액의 신장기준인 기준지가
제도의 통일방안 검토

◦ 토지평가를 위한 작곡지도의 일
원화문제 검토

◦ 건설업법

71.1.19

◦ 건축법

62.1.20

◦ 수도법

61.12.31

◦ 도로정비촉진법

67.2.26

◦ 하천법

71. 1.19

◦ 공유수면관리법

61.12.13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지방항만의
관리자가 해운항만청장으로 되어
있고, 항만법에서는 지방항만의
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양법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공유수면관리체계의 재
정비 여부 검토

◦ 공유수면 매립법

62. 1.20

9. 보건·사회·노동편

◦ 식품위생법

62. 1.20

◦ 공중위생관계법

여러개의 개별법으로 분산규정되
어 있는 공중위생관계법의 통합
정비

· 공중목욕장업법

· 숙박업법

· 이용사 및 미용사법

◦ 환경보전법

77.12.31

◦ 의료법

73. 2.16

◦ 약사법

63.12.13

◦ 재해구호법

62. 3.20

◦ 산업안전보건법

81.12.31

사업장현실여건에 맞지 아니한
규정의 유무 등 검토

10. 교통. 제신편

◦ 철도법	61. 9. 18
◦ 자동차운수사업법	61. 12. 30
◦ 도로운송차량법	62. 1. 1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3. 4. 4
◦ 항공법	61. 3. 7
◦ 선원법	62. 1. 10
◦ 우편물운송법	60. 2. 1

11. 기 타

- 각종영업등 인허가법규
 - 불이익처분시 사전의견청취제도 도입확대방안 검토
 - 유해무허가영업의 근절방안 검토
- 과징금 도입확대방안 검토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규정한 각종 법률
 - 벌금의 과태료화 방안 검토
- 토석채취규제와 관련된 각종 법률
 - 토석채취규제와 보호에 관한 단일법 제정 검토

(관련)

- 산림법
- 사방공 사법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호지법
- 낙농진흥법
- 도시계획법
- 자연공원법
- 택지개발촉진법
- 공유수면관리법
- 하천법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특별조치법
- 도로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등